

경기도

■ 구제역· A형 상황실 운영

경기도는 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 대통령 선거로 유동인구가 많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 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 대선기간과 설 연휴, 흑한기, 해빙기 등에 집중 방역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말 구제역으로 농가 2천3백곳에서 소·돼지 등 173만2천마리를 도살 처분했고,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농가 71곳에서 158만9천8백마리를 땅에 묻었다.

■ 안성시, 가금류 사육농가 A형 방역교육 실시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춘)는 지난 9월 21일 닭·오리 등 가금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철새의 이동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및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마련코자 실시했다.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장 김성식 사무관을 초빙해 시 가축전염병 재발방지와 예방 대책 추진상황, 축산농가 가축방역정책, 농가 차단 방역 및 소독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축산과 박혜인 동물방역팀장의 질병관리 등급제, 축산업허가제 등 특별강의가 있었고,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에게 AI의 발병원인 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알려 소독과 방역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임영춘 소장은 “올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모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정안성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강원도

■ '여름철 보양식 오리·닭 사육 급증

강원지역에서 사육하는 가축 가운데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오리·육계의 마릿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분기 강원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육되는 오리는 6만3천마리로 전 분기에 비해 56.9%(2만3천마리) 늘었다.

육계도 177만3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22.2%(32만2천마리) 증가했다.

이는 보양식 수요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돼지는 모돈수 회복 등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9.1%(3만1천마리) 증가한 37만1천마리로 집계됐다.

구제역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온 젓소는 1

만7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4.6%(1천두) 증가했으며, 한·육우는 23만1천마리로 전 분기와 비슷한 사육 동향을 보였다.

반면에 산란계는 283만7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6.2%(18만7천마리) 줄었다.

계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농가들이 병아리 입식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 양구군 가축 예방접종 실시

양구군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가축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개, 닭 등 40만 마리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가정에서 길러지는 애완동물도 포함된다.

소, 개는 예방접종원이 마을을 순회하며 접종하고, 돼지와 닭은 축산농민이 군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직접 접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축산농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소식지, 휴대전화 SMS 등을 통해 예방접종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 구제역·AI 청정지역 추진

충청북도가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총북' 실현을 선언했다.

도는 4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8개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20개 유관기관별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평일(오전 8시~오후 10시)과 주말 및 공휴일(오전 10시~오후 6시)에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겨울에서 내년 봄까지가 구제역 청정

화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실명담당 공무원 지정 및 운영을 강화하고,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예찰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AI 청정총북'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축산관련 시설별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을 위해 '1517 기동방역점검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총북은 지난 9년간 AI가 발생하지 않아 'AI청정총북' 이미지 제고 및 닭·오리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큰 발판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은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가 방역 및 예찰요원의 주체가 되어 주 1회 이상 농장 소독과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농장 자율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

■ 소·돼지 증가, 닭은 감소

경남에서 사육되는 소와 돼지는 늘어난 반면 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분기 경남 가축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육되는 한우·육우는 31만2천 마리로 전 분기(31만 마리)보다 0.6%(2천 마리) 늘었다.

이는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로 축산농가들이 출하를 미렸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돼지는 모돈수 회복 등에 힘입어 전 분기(113만 마리)보다 2.2%(2만5천 마리) 증가한 115만5천 마리로 집계됐다.

반면에 닭은 775만2천 마리로 전 분기(978만2천 마리)보다 20.8%(203만 마리) 줄었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가 줄면서 육계의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광역시

■ 울주군, 축산업 허가제 대비 농가 의무교육 16일 실시

울산 울주군은 내년도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육계 3만수 이상, 산란계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인 축산농가 150여 호를 대상으로 하며 세차례에 걸쳐 축산회관 3층(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71-8)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각 회당 50여 축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6일과 23일 다음달 6일로 3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등의 과정으로 하루 8시간 실시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축산업 허가제 및 허가 대상자 교육의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허가 대상 축산농가는 2년에 1차례(8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에 걸쳐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중 축사 면적 50㎡ 이상은 허가대상, 50㎡ 미만은 등록대

상으로 분류된다.

허가대상 농가는 의무교육 미이수 시 허가 불가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전남

■ 태풍 영향 닭·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

광주·전남 지역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닭과 오리의 사육 마릿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와 돼지는 소폭 증가했다.

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2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 조사’ 결과 닭 사육 마릿수는 1천421만2천200마리로 전 분기(1천976만500마리)보다 28.1%, 전년 같은 기간(1천538만2천800마리)보다 7.6% 각각 감소했다.

또 오리 사육 마릿수는 528만6천700마리로 전 분기(544만9천마리)보다 3.0%, 지난해 같은 기간(548만6천마리)보다 3.6% 각각 줄어들었다.

이처럼 닭과 오리의 사육 마릿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지난 8월 하순 2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축사 피해를 당한 농가에서 입식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라남도

■ 시·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전남도가 시와 구제역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시·구제역의 선제적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시 전염원으로 추정되는 철새의 본격적 이동 시기가 다

가고 있는 데다 최근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0~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 시기와 전파양상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 시와 구제역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방역 추진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현장 방역의식을 고취하는 등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역대책의 체계적 추진 및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8개월간 도, 축산위생사업소, 각 시군 등 26개소에 '시·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고병원성 시 발생으로 약 320여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질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닭·오리농가의 사육 환경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마을, 도로, 강, 호수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이전을 유도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요건 강화

함평군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일부 개정해 축사 시설 입지요건을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 닭과 오리는 300m에서 600m ▲개는 200m에서 600m ▲

소, 젓소, 말, 양, 사슴 등은 50m에서 100m로 각각 강화됐으며, 돼지는 종전과 같이 600m다.

축종을 변경할 때도 변경된 축종에 맞는 제한거리를 준수해야 하며, 50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축종에 관계없이 600m 이상 떨어져야 신축과 증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의 대규모화로 자연부락과 도로 인접지역까지 축산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하천·지하수의 수질을 보호하고 악취와 생활환경 저해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해남군, 친환경 축산 324농가 목표

전남 해남군이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에 주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친환경축산 인증목표를 324농가로 설정하고, 농가교육과 함께 인증가능 농가 현지독려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친환경축산의 중요성과 한·미 FTA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고, 친환경축산 농가를 확대해 선진 축산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신규농가 인증비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해 농가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재인증농가에 대해서는 100% 인증수수료를 부담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도 모두 2억4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7천9백만원보다 3배나 증액했다.

이와 함께 군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에 6천2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5천만원,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에 3억6천9백만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는 친환경축산이 경쟁력이 있다”며, “친환경축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 시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전라북도는 철새 도래기를 맞아 4일부터 내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동남아시아에서 고병원성 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월동을 위한 철새가 이달부터 우리나라를 통과함에 따라 예찰과 방역활동, 차단방역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 전파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가금류 운송차량과 업체에 대한 교육과 집중 관리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공동방제단도 운영, 소규모 농가의 소독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도내 대표적 철새 도래지인 금강, 만경강 등지와 2008년 고병원성 시가 발병한 익산시, 순창군, 익산시 등의 소하천을 중심으로 철새 분변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사육하는 닭과 오리가 갑자기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축산단체나 농가는 시 발생국가와 철새 도래지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북, 주택가 500m내 축사 못 짓는다

전북의 시·군 대부분이 주택가 부근에 축사 설

치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는 법령의 기준을 넘어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농촌 구석구석에 축사가 들어선 상황에서 뒤늦은 조치라는 비아냥 거림도 나온다.

지난 9월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부안군을 시작으로 군산, 익산, 정읍, 남원시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군 등이 잇달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조례 개정 대상이 아닌 전주시를 제외한 12개 지역이 조례안을 개정한 데 이어 김제시의회도 24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주거지와 신축 축사 간 거리. 새로 축사를 지으려면 소나 젖소는 500m, 닭·오리·개는 1,000m, 돼지는 2,000m 이상 주택가와 거리를 뒤편해야 한다. 이 조례는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설정한 기준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제한거리를 늘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과 날로 늘어나는 축사 냄새 관련 민원에 대응해 축사 신축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다. 환경오염과 악취를 우려한 환경부의 권고도 작용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조례 제정이 축산업에 대한 규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례 기준을 따르면 축사를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는 악취 등을 호소하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지만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